

정전체제, 미완의 평화인가

- 김명섭(지음), 『전쟁과 평화』(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를 읽고 나서 -

이 기 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2015년 12월,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가 쓴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한 책이 출판되었다. 김명섭 교수는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이하에서는 김명섭 교수가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연구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기 전에도 이 책이 분명 6.25전쟁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필자는 6.25전쟁 중 전선에서는 많은 이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으나 정전협상장에서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정전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전’이 단순히 전선에서의 적대행위의 중지를 넘어 ‘평화’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했다.

국제법을 전공한 필자는 아무래도 법적인 차원에서 ‘전쟁’과 ‘평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전쟁과 평화의 교차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명섭 교수의 노작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은 전쟁 ‘중’에 평화의 씨앗이 움튼다는 전쟁과 평화의 ‘중첩’을 담담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가 중첩되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측이 평화를 향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경주를 한다는 것을 저자인 김명섭 교수는 6.25전쟁이 만들어낸 정전체제를 통해 증명했다.

필자는 김명섭 교수의 노작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했던 '제8회 아산서평모임'에서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서평을 작성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저자인 김명섭 교수가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측면에서 하나의 정전체제를 입체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 만들어진 정전체제 이외의 다른 정전체제를 연구하는데도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축은 매우 유용한 정전체제 연구 프레임이 될 것이다. 필자가 서평의 몇몇 부분에서 어떤 부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김명섭 교수의 역작 『전쟁과 평화: 6.25 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의 내용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이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이 전체적으로 지닌 정교함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제8회 아산서평모임

2016년 5월 1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 소재하는 아산정책연구원에는 정치학, 역사학, 국제법, 종교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족적을 남기고 있는 20여 명의 학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의 노작 『전쟁과 평화: 6.25 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을 함께 읽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단순한 기록의 수집 또는 연대기적 서술을 넘어 정전체제를 둘러싼 여러 인간들의 모습과 그들 사이에 노정된 '차이'를 드러낸 역작을 놓고 저자인 김명섭 교수가 직접 발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6.25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나 저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 교수가 지정 토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서평모임이었다.

김명섭 교수는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개의 틀을 놓고 벌어지는 인간들의 생각, 표현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둘러싼 '시간'과 '공간'을 담담히 설명해 나갔다. 김명섭 교수의 지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20세기의 30년 전쟁'의 마지막, 즉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경험을 공유한 인간들이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전쟁에 대하여 정전체제라는 사실상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6.25전쟁은 '정지'되었다. 그러면 1945년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전체제는 '평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단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분석적이며 입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김명섭 교수는 온 힘을 기울여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우리 앞에 내놓은 것이다.

다만 제8회 아산서평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네 시간 이상 함께 이야기했음에도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김명섭 교수가 제시하고자 했던 ‘전쟁 중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이러한 노력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인간들의 차이’보다 다소 기술적인 용어의 사용 문제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국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입장에서 아산서평모임에서 ‘정전’과 ‘종전’ 그리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의미 없는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아직까지 이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너무 먼 주제임을 생각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절로 생겼다는 것으로 판단을 갈음하고자 한다.

1951년 7월 10일

6.25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 1953년 7월 27일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날이다. 하지만 1951년 7월 10일이 어떤 날 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날은 정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전협상이 시작된 날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의 씨앗인 정전체제를 만들기 시작한 날이 바로 1951년 7월 10일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명섭 교수가 밝혀낸 것처럼 조선인민군 대표단장,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장, UN군 대표단장 그리고 한국군 대표는 서로 다른 시간에 만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성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던 UN군 대표단장과 한국군 대표는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에, 그리고 서머타임을 적용한 적 없었던 조선인민군 대표단장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장은 1951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처음 만났던 것이다. 이처럼 ‘차이’를 지닌 채 만난 양측은 정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는 있었지만 정전협상이 시작되었음에도 전선에서는 여전히 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1951년 7월 10일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전선에서는 곧 포화가 멈추게 될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군사령관들 간에 체결되는 정전협정은 24시간 또는 1주일처럼 특정 기간 동안 ‘모든(whole)’ 군대 간에 ‘모든(whole)’ 전선에서 적대행위의 중지를 목표로 체결된다.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 자체는 종전을 상징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전쟁을 지속을 의미하는 적대행위의 재개로 회귀할 수도 있다. 정전협정 체결만으로는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전협정 체결은 평화협정 체결에 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노력을 필요

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51년 7월 10일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체결 노력은 1953년 7월 27일이 되어서야 끝났다. 이 점만 보더라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은 일반적인 정전협정과 다르다. 더구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은 24시간 또는 1주일과 같은 특정 기간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정전체제를 ‘미완의 평화’라든가 ‘전쟁 중’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정전협상이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전체제를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51년 7월 10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며, 저자인 김명섭 교수가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하여 6.25전쟁과 한반도에 형성된 정전체제를 분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은 크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생각된다.

‘6.25전쟁’, 과연 올바른 표현인가

제8회 아산서평모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는 ‘6.25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 문제였다. 저자인 김명섭 교수는 현재 한국의 모든 중·고교 교과서들이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하나하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6.25전쟁이라는 용어 사용의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산서평모임 시 토론에 임한 박명림 교수와 이완범 교수는 다른 견해를 밝혔는데, 박명림 교수는 전쟁이 시작된 날을 이용하여 어떤 전쟁을 명명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고, 이완범 교수는 6.25전쟁으로 부르든 한국전쟁으로 부르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논의가 전개되면서 저자인 김명섭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이 전복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전쟁’을 벌였다는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전쟁’도 괜찮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에 관한 논쟁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전쟁을 놓고 이 전쟁을 정의하는 다양한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용어 사용에 관한 정리가 어떤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인 것은 분명하나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가치관 또는 이념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용어 사용조차 합의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저자인 김명섭 교수가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명확히 밝힌 것은 제3자가 자신의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김명섭 교수는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같은 전쟁을 경험한 다양한 인간들의 기억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용어인 ‘6.25전쟁’을 통해 ‘인간’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고자 했다. 이는 저자가 어떤 특정 가치관 또는 이념보다 인간중심적으로 전쟁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저자의 입장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6.25전쟁에 대하여 정확한 인문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6.25전쟁이라는 용어는 만족할 수 없는 용어이나 6.25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필자에게도 6.25전쟁이라는 용어는 어릴 때부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용해온 용어이기에 경험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김명섭 교수의 6.25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의 발현이라든가 정치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된다.

정전협상에 관계한 모든 인간들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은 정전협상 막전막후의 인간들에 대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 특히 스탈린,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리커농과 같은 인간들이 지니고 있던 세계관, 트루먼, 아이젠하워, 맥아더, 리지웨이 등이 가지고 있던 배경, 이승만, 김일성과 이들을 보좌했던 인간들의 가치관이 정밀하게 서술된 점은 6.25전쟁 연구에 있어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을 경험했다는 점이며, 이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6.25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김명섭 교수는 정전협상 막전막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간극, 즉 차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김명섭 교수의 노작을 읽으면서 특히 필자를 놀라게 했던 내용은 정전협상장에서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중 ‘리커농’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지위와 역할이다. 중국 외교부 제1부부장 및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정보부장이라는 고위직 인물인 리커농이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의 한 일원으로 위장하여 정전협상을 이끌었던 점이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에 잘 부각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이 현재의 분단 상태 및 정전체제 구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다.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발표 이후, 1992년 수교 이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던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고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이 과연 자신의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게 돌리고 있는데, 김명섭 교수의 작품을 읽어보면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반도 정세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상장에서 리커농이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아 정전협상을 주도했던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리커농의 역할 및 리커농에 대한 마오쩌둥의 지시를 살펴보면 중국은 애초부터 정전협상을 전통적인 개념 하에서 군사령관들 간의 협상으로 치부할 생각이 없었다.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야기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1919년 6월 28일 체결된 베르사이유조약의 협상 기간보다 6.25전쟁의 정전협상이 길어져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정전협상에 임했으며, 소련이 공식적으로 정전협상장에 나오지 못하는 한 중국의 전략은 정전협상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김명섭 교수의 작품을 읽으면 사드 배치 국면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부리는 몽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그 때 그 때 우호적으로 또는 비우호적으로 만들어 미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최근에야 형성된 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사드 배치 국면에서 비록 사드 배치 자체와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대중 문제에 관여하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김명섭 교수의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을 읽는다면 중국을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게 되리라 확신한다.

이외에도 1953년 7월 27일 당시 정전협상 한국군 대표 및 이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을 지냈음에도 월북한 ‘문제적 인물’ 최덕신, 프랑스대사직을 수행하던 중 의문사한 이수영 등의 이야기를 통해 정전협상에 관계한 인간들의 이면을 조명하는 김명섭 교수의 저작은 훌륭한 참고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령 전문가들 사이에는 간혹 회자된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김명섭 교수의 역작은 6.25전쟁의 본질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시간과 공간을 정의했는가

정전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전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의 문제였다. 정전협상장 밖에서는 여전히 포화가 멈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마오쩌둥은 리커농에게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정전협상의 신속한 체결을 통해 일

단 포화를 멈추는 ‘잠정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점은 현재 구축된 정전체제를 잠정적 체제로 보고 기술적으로 남북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찌면 적절한 서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명섭 교수는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을 통해 정전협상은 불완전할 수는 있으나 잠정적 체제가 아닌 ‘영구적’ 체제 구축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영구적 체제가 적절히 운영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일 수 있으나 사실상의 평화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정의와 관련하여 양측은 정전협상을 통해 1950년 6월 25일 이전 상태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정전협상장 밖의 전선을 유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양측은 1951년 11월 27일 육상에서의 잠정적 군사분계선에 대하여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의미를 가지기 위한 시점, 즉 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1951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경우 잠정적 군사분계선이 최종적 군사분계선이 될 것이라는 합의를 무시하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마오쩌둥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1951년 12월 28일 리커농에게 정전이 “비교적 긴 시일 동안 더 지연되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장의 포화를 멈추는 것보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마오쩌둥의 입장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즉, 마오쩌둥은 공포와 참혹이 공존하는 시간을 더 확장했던 것이다. 마오쩌둥에게 있어 정전협상의 조속한 체결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러한 마오쩌둥의 태도는 한반도에서의 혼란을 지속시켰던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획정하여 공간을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 회담의제의 채택에 이어 바로 논의된 문제였다. 정전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조·중인민군 대표단은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의 태도였다. 6.25전쟁은 자신들이 38선을 부정하여 일으킨 전쟁인데, 정전협상 초기에 그들이 원칙적으로 원했던 것은 다시 한 번 38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UN군 측은 정전협상장 밖의 전선을 존중하는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에 적용했던 ‘징벌적’ 재조정의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정전협상 시 38선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기에는 양측은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쉽게 말해, 북한이 38선을 부정함으로 6.25전쟁이 시작되었고, 정전협상이 열리고 있던 와중에도 정전협상장 밖에서의 양측의 목표는 38선 회복이 아니었다. 더구나 UN군 측은 해상과 공중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38선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사실 조·중인민군 대표단이 원칙적으로 38선 회복을 주장한 이유는 자신들의 해군력 및 공군력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명섭 교수의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은 조·중인민군 대표단이 38선이 아닌 현재의 전선을 주장하게 된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북한을 철저히 조종하고 있었다. 중국과 소련이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만들었고, 김일성은 이들이 제시한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8선이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잠정적 군사분계선 또한 우리의 의지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가 되었다.

전쟁포로, 그들도 인간이었다

김명섭 교수의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은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나긴 정전협상을 통해 전쟁포로 문제가 정전체제 구축에 큰 장애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조·중인민군 대표단은 전쟁포로의 전원송환을 주장한데 반해, UN군 대표단은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전협상 동안 전쟁포로 처리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였고, 이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중립국을 택했던 전쟁포로의 목적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는 점과 UN군 포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중국 등으로 향했던 포로의 개인적 인생이 조명된 것은 김명섭 교수의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쟁포로 문제를 이념적 갈등의 틀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전쟁포로 문제가 개인적 선택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김명섭 교수가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인 것이다.

이승만과 정전협정 체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다. 한 쪽에서는 국부로, 다른 한 쪽에서는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하고 친일파에 협력한 인물로 보고 있다. 정전협상과 관련하여서도 이승만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정전협상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명섭 교수는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을 통해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 묘사를 하고 있다.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 이 책이 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았으나 정전협정 체

결을 용인하는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실질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이승만이 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 ‘평화선’을 선포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명섭 교수에 의하면 이는 일본 우익의 준동을 막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김명섭 교수가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을 용인하는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튼튼한 방위체제를 얻어냈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현하고 싶다. 특히 이 점은 정전협상에 한국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즉, 이승만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전선을 지휘하는 군사령관들 간의 협정인 정전협정에 서명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정전협정 체결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미국을 압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1952년 평화선 선포 등을 통해 이승만이 일본 우익의 준동을 막았다는 것은 다소 과한 해석이다. 1952년 평화선 선포의 주요 내용은 한국 인근 수역에서 생물 및 비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1945년 9월 28일 미국의 ‘트루먼 선언(Truman Proclamation)’을 답습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선언일 뿐이지 평화선 선포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평화선 선포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여하튼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소재를 정전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 것은 김명섭 교수의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이 크게 기여한 바라 할 수 있다.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제법 관련 내용 서술에 대한 아쉬움

필자는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라는 역작을 읽으며 저자인 김명섭 교수가 노작을 만들면서 국제법 개념에 대한 이해나 국제법과 연관성이 있는 용어의 번역을 위해 국제법 자문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8회 아산서평모임에서 박명림 교수는 “중국과 UN이 지속적으로 적대상태”라고 언급하며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명섭 교수는 별다른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가 바로 저자의 저작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명섭 교수는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164면에

‘Intervent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Korea’라는 1951년 2월 1일 채택된 UN총회 결의 제498호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결의가 바로 박명림 교수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UN총회 결의 제498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자체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UN총회 결의 제498호가 1951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침략자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UN의 회원국인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1951년 당시 정부는 같은 공산당 정부라 하더라도 같은 국가주석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박명림 교수의 질문은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는 국제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질문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김명섭 교수는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194면에서 덴마크 병원선 유트란디아호를 UN의 영토라 표현함으로써 국제기구가 영토를 가질 수도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 자문 결여로 인해 오류를 보이고 있는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내 몇몇 부분들은 추후 개정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가며

김명섭 교수의 노작을 다 읽은 후 필자는 김명섭 교수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이 온화보다는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열전보다는 나았듯이 코리아 정전체제도 평화체제보다는 못했지만 인민민주주의자들이 일으켰던 6.25전쟁이나 제국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침략전쟁과 같은 열전보다는 나았다”라고 언급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었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미완의 평화라 간주하며 기계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전쟁이 종료된다는 시각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오히려 김명섭 교수처럼 정전체제가 지난 60년 이상 동안 이념과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도로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왔다는 실질적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명섭 교수는 이러한 결론을 6.25전쟁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정전협상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6.25전쟁 중 정전협상은 일반적인 정전협상과는 달랐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전체제가 구축한 평화가 일시적인 적대행위의 중지로만 간주되기에는 60년 이상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을 이론적으로 철저히 연구한 김명섭 교수에게 경의를 표현하며 필자의 서평을 마치는 바이다.